"적조 덮치면 양식장 물고기 풀어라"

여수·고흥 '가을적조' … 떼죽음 되풀이 예방을

오염 줄이고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스템 갖춰야

때아닌 가을 적조로 9일 경남 남해에서 어류 6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조가 밀려와 피해 권역에 포함될 경우, 미리 양식장 어류를 방류해 어류 폐사에 따른 해양오염을 줄이는 대신 그 피해액을 적정 수준에서 지자체가 보상하는 선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적조 연구와 피해 대응이 가능한 연구 기관을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해 일대 해역에서 8일까지 돔류 6만1790마리, 농어 1200마리, 볼락 960마리, 조기 1200마리 등 모두 6만515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에도 현재 여수시 개도~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륵도 종단 해역과 고흥군 영남면~내나로도 및 고암면 죽도 일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처럼 전남해역에 '가을적조'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

흔히 적조는 온도가 떨어지고, 바닷물의 저층과 상층이 뒤집히는 가을 무렵에는 소멸하지만 올해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예년보다 전남지역 바닷물 온도가 2도 가량 높기 때문에 가을 적조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조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남지역에서는 1995년 국내에서 적조가 첫 발견된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적조 피해액만 454억원에 이르고, 폐사된 돌돔과 넙치·전복 등은 2190만 마리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26일 이후 적조 유해생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수와 고흥 일대 8개 양식장에서 전복 260만 마리, 돌돔 33만8000마리, 넙치 15만7000마리가 집단 폐사해 1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 어업 생산량 2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수산물의 보고' 전남의 위상이 적조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적조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바다유해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비를 위해 연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 정부에 200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또 적조 대비 어류 방류 예산을 늘려 밀려드는 적조로 애써 키운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사전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어차피 어류 폐사로 수거·매몰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방류해 어족 자원이라도 늘리자는 선진 시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조 대비 양식장 어류 방류는 끝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민들이 '한 마리라도 살려보겠다'며 꺼리고 있다"면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고, 어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어류 방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검찰 무리한 수사' 도마에

장휘국·장만채교육감 입건유예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전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수차례 소환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건유예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내사 등의 수사 전단계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그러나 9일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CNC 관계자 8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밥값·경조비 등 업무추진비 전국 상위권

광주시·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시·도교육감이 올 상반기에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가 각각 5243만원, 70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소속 박혜자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5243만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080만원이다. 나머지 시·도 교육감들이 같은 기간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최소 2951만, 최대 4477만원으로 광주·전남 시도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안팎으로 많았다.

업무추진비는 교과부 훈령(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둔 예산으로, 시·도교육감과 직속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경비다.

지난해에도 광주시교육감은 6585만원, 전남도교육감은 1억163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관계자 격려 오·만찬 비용과 축·조의금 지출 등이 대부분이었다.

장만채 도교육감은 본청 직원 격려를 위한 설명절 선물로 1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174건의 업무집행비를 집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수공제회 파산선고

23일까지 채권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전국교수공제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날 파산 선고로 교수공제회 소유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서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 배당하게 된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첫 채권자집회는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광엑스포 제어 컴퓨터 훔친

용역업체 직원 검거

광주시청 중앙관리실에서 경관조명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훔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컴퓨터는 지난 2010년 광엑스포 총감독인 '빛의 거장' 알랭귈로(Alain Guilhot)가 디자인한 작품의 제어장치로, 시청 직원들은 20여개월 동안 도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광주시청 중앙관제실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박모(45·시청 중앙관제실 근무)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께 광주시청 중앙관제실에서 외관조명 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제어컴퓨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함께해요 美 나들이' 광주시 북구청과 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가 9일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북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함께해요 美 나들이 한마당'에 참여한 시민들이 헤어 및 미용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대생 고용 원룸서 유사성행위

순천경찰, 30여명 입건

성매수남 초등 교사도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자와 성매매 여대생, 성매수남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성매수남중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포함돼 있었다.

순천경찰은 9일 여대생을 고용해 유사성교행위를 시킨 업주 김모(29)씨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대생 이모(2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성매수남 김모(24)씨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은 업소를 차려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씨 등 여대생 3명을 고용, 손님으로 찾아온 김모씨 등 26명에게 1회에 8만원을 받고 모두 68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시켜 54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중 김모(31)씨는 순천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장천동 일대의 원룸을 임대해 이용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손님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와 생활정보지에 '바(BAR)에서 일할 여직원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들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김씨 등은 경험이 없는 여대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직접 유사성교행위를 했으며, 직접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지역에서는 최초 적발 사례"라며 "광주지역에서 유사한 업소가 성업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검사가 판사보다 일 많다?

광주지법·지검 한 달 사건 처리

판사 1명 당 53.4건·검사 182.7건

광주지법(지원 포함)의 판사 1명이 한 달에 53.4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반해 광주지검(지청 포함) 검사 1명은 무려 182.7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한 달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 검사들의 한 달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77.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 판사는 전국 평균보다 6.2건이 적은 반면, 광주지검 검사는 5.2건을 더 처리했다.

광주고등법원 판사의 한 달 처리 건수는 11.8건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에 비해 0.7~1.8건이 더 많았다.

전국 16개 지법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한 달 평균 73.9건을, 16개 지검 중에서는 대전지검 검사가 한 달 평균 197.4건을 처리해 업무 강도가 가장 셌다.

대법원 대법관의 한 달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230.2건에 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창틀에 지문 남겨 성폭행 미수 덜미

쌍나팔

○…만취한 상태에서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강렬한 저항에 겁을 먹고 줄행랑을 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윤모(24)씨는 지난 8월20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A(여·22)씨의 원룸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것.

○…윤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창틀에 3㎝ 크기의 오른손 검지 지문을 남겼다가 경찰에 덜미.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